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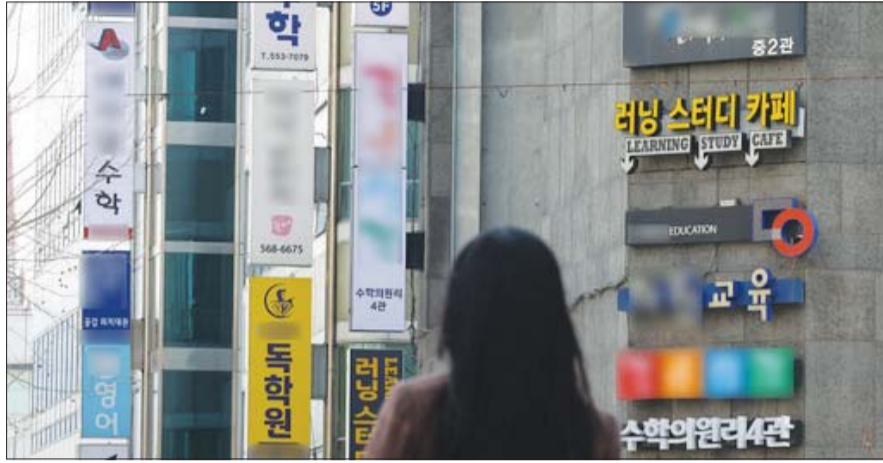
사교육 빈틈 메운다... 방과후 확대하고 AI 진학상담 도입

교육부, 사교육비 경감 방안 발표
초3 이용권 연말 70%까지 확대
중학 글쓰기·논술 단계적 확대
취약층 영어·수학 화상 지원 늘려
대입정보포털 AI 상담 기능 신설
학원 불법 교습비 단속·제재 강화

현재 초등 3학년의 57.2%가 받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올해 말까지 희망 지역에서 70% 수준으로 확대된다. 중학생 글쓰기·논술 수업은 늘리고, 취약계층 대상 온라인 영어·수학 지원도 확대한다. 대입정보포털에는 AI 진학상담도 새로 들어선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급별·특성별 사교육 수요를 분석해 마련됐다.

◆ 초등 돌봄·방과후 확대



지난달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뉴스시스

교육부가 올해 도입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달 기준, 초등 3학년의 57.2%가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희망 지역에서 초등 3학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초등 4학년까지 확대한다. 초등 1·2학년에게는 매일 2시간의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해 '사실상 3시 하교'를 유지한다.

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과 예술동아리를 통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 문해력·기초학력 강화
교육부는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사업'을 통해 독서 기반 프로젝트·토

론 수업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서 독서동아리와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독서동아리 연계 글쓰기 지원은 2027년 500개교에서 2030년 3300개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초학력 관리 강화를 위해 2027년부터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읽기·쓰기·셈하기 과목을 수직 척도 점수로 개발해 초등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적용한다.

초등학교 중심으로 기초학력 전문 교원을 배치하고, '1교실 2강사제'를 올해 6000개 초중고로 확대 운영한다. 중·고교 사회적·지리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해 원격으로 영어·수학을 지도하는 '화상 튜터링'은 2026년 1학기 1300여명에서 2학기 3000명, 2027년 5000명까지 확대한다.

◆ 학원 불법행위 단속 강화

교육부는 대입정보포털 '아디가'에 인공지능 기반 진학 상담 기능을 신설한

다. 올해는 대화형 대입 정보검색 기능과 학생부종합전형 전문 상담 기능을 도입하고, 2027년에는 학생부교과·수능 전형 중심의 개인 성적 기반 맞춤형 대학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원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행위와 연계된 학원강사 강의 제한과 학원 교습 정지 등의 제재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또 학원법 개정을 통해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과 과태료 상향도 추진한다.

최고진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 체계 내에서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목적이 있다"며 "학교에서 양질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414km 구축

482개 지역, 약 12만9천 세대 공급

경기도가 내년까지 도 전역에 총 414km 규모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새로 설치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광주시 은골마을, 의정부시 빼벌마을 등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던 482개 지역, 약 12만9천 세대가 새롭게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취사천리를 비롯한 도내 6개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공사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2026~2027) 공사계획'을 31일 공고했다. 이번 계획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도민의 보편적 에너지 이용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간 에너지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

올해는 총 1,247억 원을 투입해 광주시 은골마을 일원 등 306곳(약 5만8천 세대)에 211km의 배관을 우선 설치한다.

이어 내년에는 1,202억 원을 투입해 남양주시 진접2지구 등 176곳(약 7만1천 세대)에 203km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에너지 복지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군별 세부 공사 계획은 각 시군청이나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업자 누리집, 경기도 누리집서 확인할 수 있다. 도민들은 거주 지역의 포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향후 가스 공급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준비할 수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배관망 확충은 기반시설을 넘어 도민들의 난방비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2025년 말 기준 경기도 도시가스 보급률은 83.9%로 전국 도 단위 최고 수준이지만, 마지막 한 가구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형 키즈카페, 올해 30곳서 6개월간 운영

이달~6월·9~11월 주말마다 순회
한강공원·식물원 등 30곳 확대

지난해 아동 1만 9000여명이 방문하며 큰 호응을 얻었던 주말 특화형 야외 키즈카페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가 올해 운영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개최 장소도 인기 명소 중심 30곳으로 확대해 시민들을 찾아가는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가 올해는 4~6월, 9~11월 주말마다 운영된다. 운영 장소도 잠원, 여의도, 뚝섬한강공원 등 8개 한강공원을 비롯해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 등 주요 녹지공원과 허준근린공원, 구의공원 등 근린공원을 포함해 총 30개소로 확대된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동시에 운영된다. 대형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 모험놀이터 조감도. /서울시

버블쇼, 가족 참여형 레크레이션, 물총싸움, 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가족 모두가 뜻깊은 주말을 보낼 수 있는 여가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돌봄 양육자들을 위한 휴게공간도 마

련돼 아이들이 놀이기구와 체험활동을 즐기는 동안 휴식할 수 있다.

'여기저기서울형키즈카페' 이용대상은 연 나이 기준 4~9세 아동으로, 1회 2시간씩 총 3회차로 운영된다. 이용료는 아동 1인당 5000원이며, 보호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입장 인원은 각 장소별 놀이공간 면적에 해당하는 정원별 사전예약 80%, 당일 현장접수 20%이다. 사전예약은 '우리동네키움포털' 누리집에서 6일 오전 10시부터 할 수 있다.

마세추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테마별로 특색을 갖춘 이색 놀이기구와 알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이들에게 즐겁고 신나는 놀이경험을 제공하고, 양육자들에게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17 | 해질 / 18:55

4월 2일 (木)
음력 : 2월 15일

수도권 날씨
7 ~ 18°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교원 민원부담 줄이고 교육활동 보호 강화

서울학교안전공제회, 특이민원 대응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맞춰 교원의 민원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이민원 전문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특이민원을 조기에 식별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예방 중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원안심공제는 민원 발생 초기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분쟁 위험도를 점검하고, 반복 제기나 과도한 요구 등 갈등 징후가 확인될 경우 교육활동보호전문가가 조정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갈등이 심화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초기 단계에서 분쟁 확산을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제회는 학교 현장의 판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이민원 분류 체크리스

트'도 마련했다. 체크리스트는 민원 내용과 요구의 성격, 제기 방식과 표현 양상, 사안의 경과와 반복성, 외부 확산 가능성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두 개 이상 기준에 해당하면 특이민원으로 분류해 전문 대응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제회는 4월 1일자로 정규 인력 3명을 추가 배치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기 대응 속도와 분류 체계의 정밀도를 높이고, 갈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美 국무장관 "이란전 목표 조기 달성 중... 결승선 보여" /사진 뉴스시스
▲트럼프 '조기 종전' 시그널에 UAE... "호르무즈 뚫겠다" 배수진

▲미국인 66% "목표 달성 못해도 이란전 빨리 끝내야"
▲美 USTR, 韓디지털규제 '무역장벽' 지목... 산업부 "정부 의견서 전달"

▲러 외무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美 이란 침공으로 일시 중단"
▲대만 당국, 日구마모토 공장서 TSMC 3나노 생산 허가